고용노동부

보 도 자 료

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1. 12. 15.(수) 조간 *인터넷 2021. 12. 14.(화) 12:00 이후 / 총 8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	과 장 박일훈 사무관 신종범	044-202-7404 044-202-7410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농촌 농번기 구인난과 조선업 인력수급 문제,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개선한다!

- '22년 지역·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실시 -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12.14.(화) '2022년 지역·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' 공모를 실시하였다.

□ 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(이하 '지산맞')은

○ '06년부터 시작 되었으며, **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**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·지원*하는 공모사업이다('22년 예산 1천억원).

* '21년 184개 자치단체, 511개 일자리사업 지원

○ 사업내용은 **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계**하며, 재정자주도에 따라 **10~30%의 지방비**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□ '22년 지산맞 사업의 **주요 개선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□ **사업내용 측면**에서, 일반 사업 지원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**별도의 '사업모델'**을 마련하여, **'지역-산업 연계 특화 사업'**을 우선 지원한다.

○ **첫째**, 최근 심화되고 있는 농촌 구인난을 개선하기 위해 **「농번기 구인난 개선사업」**을 실시한다.

- 이 사업은 **광역-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都市-農村 연계 사업**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참여자에게는 **교통편의, 숙박비** 등을 제공한다.

- 자치단체는 **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지원내용을 구성하여 공모·신청**할 수 있으며,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.

농촌 농번기 구인난 개선 사업(예시)

◈ 광역단체 주관하여, "**농번기 일자리지원 협의체**" 구축하고, 공동으로 사업 추진
* 자치단체(광역, 기초) – 지방노동관서 – 농림부(구인기관)으로 구성
* 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·여성층 구인에 집중

◈ 참여자 지원 내용(예시)

교통비	ㅇ 참여자 개인 이동은 1일 5천원~1만원 지급 ㅇ 자치단체에서 차량운행시 차량 임차비(운전기사 포함) 지원
숙박비	ㅇ 1박당 2~3만원, 2일 이상 연속 참여시 지원수준 상향, ㅇ 마을회관 또는 마을 공동시설을 숙박시설로 활용시 주당 최대 50만원 지원
보험료	ㅇ 참여자 1인 3천원 민간상해보험 지원

○ **둘째**,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**조선업** 등 **국가기간산업***에 청년 등의 취업촉진을 위해 **산업 맞춤형 내일채움공제사업**을 실시한다.

* 조선업(선체의장, 선체조립), 특수용접, 전기기기제작 등 46개 국가기간산업직종

- **청년내일채움공제**(이하 '청내공')**의 지원수준·방식을 준용**하여, **기본 사업모델**을 제시하되,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공모 참여할 수 있다.

* 만 34세 이하,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, 가입기간 중 당해사업장 유지 등, 2년 근속시 만기 공제금 1,200만원 적립(본인 300만원+기업 300만원+정부 600만원)

- 상반기는 **시범사업**으로 **조선업 사내협력사**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실시한다. **기업**이 **부담**하는 **기여금**은 **자치단체 지방비**로 지원하고, **사업장 이동을 제한적으로 일부 허용**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.

조선업 맞춤형 내일채움공제 사업(예시)

◈ 조선업 신규인력의 짧은 근속기간(1년 이내), 사내협력사의 잦은 폐업 등을 고려하여, **조선업에 근속하는 경우 사업장 이동 허용 등 지원대상 확대**

(예시1) 원청내 고용 유지, 하청(사내협력사) **간 이동 허용**

→ 조선업 원·하청 구조 반영, 사업장(원청) 단위 숙련인력 양성

(예시2) 원청간 이동 허용, 지역·업종내 고용 유지

→ 사업장간 이동 현실 반영, 지역 단위 숙련인력 양성

○ **셋째,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장**에 대해 **"기업 고용·경영지원 사업"**을 지원한다.

- 이 사업은 **고용유지, 이·전직 지원 등 고용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업 경영개선 서비스도 함께 제공**한다는데 특징이 있다.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은 자치단체에서 설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.

기업 고용·경영지원 사업(예시)

◈ (지원내용) **고용센터-자치단체의 고용유지·이직지원 서비스 연계**와 함께, 자치단체 중심으로 컨설팅단 구성하여 '**기업 경영지원 컨설팅**' **제공**

* 기업에서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, 특히, 업종전환 희망기업에 대해 사업전환(중기부) 등 타부처 사업 안내·연계

◈ (컨설팅단) 자치단체, 고용노동청, 중기청, 신용·기술보증재단 등으로 구성

○ **넷째,**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**혁신선도 사업**을 지역별로 발굴하여 중점 추진한다.

[혁신선도 사업 주요 모델]

- **(전라남도)** 에너지신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, 그린·디지털 뉴딜 인력매칭 프로그램 등
- **(강원도)** 기술기반 중소기업 상생협력, 레저휴양 서비스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등
- **(경상북도)** 미래형 스마트전장부품 개발 및 전략 수립 지원 등

□ **사업운영 측면**에서, **현재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**하여 지산맞 사업의 **지원범위·방식**을 다음과 같이 **제도 개선**한다.

○ **첫째,** 노동시장 권역이 초광역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, **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** 광역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**초광역단위 사업**을 추진할 경우 우대 지원한다.

초광역권 사업(예시)

◈ (**동남권**) 부산(거주지, 교육훈련) - 울산(취업처) - 경남(거주지, 취업처) ⇒ 온라인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광역 취업지원

◈ (**충청권**) 대전(거주지, 산단) - 세종(거주지) - 충남(산단) - 충북(거주지) ⇒ 행정접경 지역 산단 중심 취업알선, 교육훈련 지원

○ **둘째,** 지역 청년·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, **지역 일자리 격차해소**를 **위해, 비수도권 청년·여성 대상 일자리사업**에 대해 **우대 지원**한다.

○ **셋째,** 저탄소·디지털 등 **산업구조 전환과정**에서 발생하는 **고용불안**을 해소하기 위한 **노동전환 일자리 사업**을 추진할 경우, 우선지원 한다.

□ 고용노동부 **김영중 고용정책실장**은 "지산맞 사업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**자치단체에서 직접 일자리사업을 설계**하여 실시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"라고 하며,

○ "이는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의 **사각지대**를 메워 줄 수 있는 한편, **지역소멸 위기를 극복**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"이라며 지산맞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
○ 또한, "'22년도 지산맞 사업은 최근 **노동시장 현실을 최대한 반영**하고,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**지역과 산업에 초점**을 맞추어 **다양한 특화 사업을 확대**하는데 중점을 두었다"라고 하며

○ "이번 지산맞 사업 개편이 그간 누적된 지역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**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**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"고 하며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종범 사무관(☎044-202-7410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사업모델 예시

예시 1 농촌 농번기 구인난 개선 사업

□ **추진필요성**

○ 식품산업 다각화 등으로 농업생산은 증가하고 농업인력 수요는 증가 추세이나, **농업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은 지속**

○ 인구감소로 인한 **지방소멸 가속화**, 한시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**외국인 근로자 급감** 등으로 **농번기 구인난 지속 심화**

□ **사업내용:** 광역-기초 컨소시엄을 구성, **都市-農村 연계사업**으로 실시

○ **(구인·구직 체계)** 광역-기초단체가 연계하여 **인력수요 농촌**과 **인력공급 도시**를 **선정**하고, 도시에서 인력을 구인하여 농촌에 알선

- **광역단체** 및 **도시 기초단체 일자리 기관**이 구직자를 모집하고, **농촌 기초단체**는 농업인력 수요를 파악, 구직자를 농가에 알선

- 광역단체는 **구직자 인력풀**을 구축하고, **상시적으로 서비스 제공**

○ **(지원체계) 광역단체 주관**하여 기초단체 - 지방노동관서 - 농림부 인력알선기관으로 「**농번기 일자리지원 협의체**」 구축, 공동 사업 추진

- 각 기관 보유 일자리 인프라 및 구인·구직 프로그램 상호 연계

○ **(지원내용) 교통편의**(차량 또는 교통비), **숙박비**(숙소 임차비), **식비**, **보험료**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 등 지원

교통비	○ 참여자 개인 이동은 1일 5천원~1만원 지급 ○ 자치단체에서 차량운행시 차량 임차비(운전기사 포함) 지원
숙박비	○ 1박당 2~3만원, 2일 이상 연속 참여시 지원수준 상향 ○ 마을회관 또는 마을 공동시설을 숙박시설로 활용시 주당 최대 50만원 지원
보험료	○ 참여자 1인 3천원 민간상해보험 지원

예시 2 조선업 맞춤형 내일채움공제 사업

□ **추진필요성**

○ 조선업 사내협력사 신규인력의 **짧은 근속기간**(1년 이내), **협력사의 잦은 폐업** 등 고려 시, **현행 청내공 지원요건*** **충족 곤란**

* 만 34세 이하,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, 가입기간 중 당해사업장 유지 등, 2년 근속시 만기 공제금 1,200만원 적립(본인 300만원+기업 300만원+정부 600만원)

○ 이에, **조선업 맞춤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진**하여, 조선업 신규인력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

□ **지원방안**

○ 기본적으로 고용부 **청년내일채움공제**의 **지원수준·방식**은 **준용**

< 예시: 조선업 맞춤형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및 주체별 기여금(2년 만기시)>

만기 공제금	본인 적립	기업 기여금 → '자치단체 지원금'	정부 지원금
1,200만원	300만원	300만원	600만원

○ 조선업 **사내협력사 근로자**를 대상으로 하며, **기업 기여금은 자치단체가 지원**토록 하고, **사업장 이동 허용** 등 지원대상 확대

사업장 이동 허용 방안

- **(Option 1) 원청내 고용 유지, 하청**(사내협력사) **간 이동 허용**
  → 조선업 원·하청 구조 반영, 사업장(원청) 단위 숙련인력 양성
- **(Opton 2) 원청간 이동 허용, 지역·업종내 고용 유지**
  → 사업장간 이동 현실 반영, 지역 단위 숙련인력 양성

○ 세부 지원요건, **지원기간**, 지원수준 등은 **자치단체에 자율권**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운영 유도

예시 3 기업 고용·경영지원 사업

□ 추진필요성

○ 탄소중립・디지털 등 산업구조 개편, 지방소멸 가속화,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 우려

○ **경영악화 사업장***에 대해, 기업지원 및 고용유지, 이・전직 서비스 제공 강화 필요

* 대상사업장 범위와 구체적 지원내용은 자치단체에서 설계

□ 지원내용(안)

○ (**경영악화 사업장**) 고용센터-자치단체의 **고용유지・이직지원** 서비스 연계와 함께, **자치단체**를 통한 '**기업 경영지원 컨설팅**' 제공

- 컨설팅단은 자치단체, 고용노동청, 중기청, 신용・기술보증재단 등으로 구성

- 기업에서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

- 특히, 업종전환 희망기업에 대해 사업전환(중기부) 등 타부처 사업 안내・연계

○ (**폐업(예정) 사업장**) **퇴직자 생활안정** 및 **재취업** 지원에 집중

- **현장 설명회**를 개최, 고용센터 및 지산맞사업 서비스 적극 안내

- **고용센터-자치단체 등 연계**를 통해 퇴직자 집중 취업지원 실시

예시 4 초광역권 일자리 사업

□ 추진필요성

○ 교통발달 등으로 인해, 인구 유·출입, 출·퇴근 등이 하나로 연계되는 **초광역생활권**이 형성*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나,

* (동남권) 부산 거주 ↔ 창원 또는 울산 출퇴근/ 경남 거주 ↔ 부산 소재 대학에 진학

○ 행정 단위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, **초광역권 차원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협력**을 통한 일자리 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

⇒ 초광역권 사업 추진시 선정 우대, 해당사업 지방비 매칭 5%p 인하

□ 사업내용(안)

○ (**시스템**) **초광역권 일자리 협의체** 구성·운영

- 광역자치단체, 고용노동청, 지역인자위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

○ (**취업지원**) 광역단위 **(온라인) 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** 등

○ (**교육・훈련**) 초광역단위 수요 맞춤형 **합동(연계) 훈련** 추진

- 초광역권 공통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훈련 및 채용수요 공유하고, 기존 지산맞 사업 연계하여 우선 추진

- 필요시, 장기사업으로 공동 훈련센터 구축・운영 방안 논의

○ (**광역장려금**) 교육·훈련 수료 → 알선 취업 시 → **장려금 지원**

* 기존 장려금 사업 우선 활용하고, 지산맞 사업으로 지원(**광역면접비, 이주지원비 등**)

초광역권 사업(예시)

◈ (**동남권**) 부산(거주지, 교육훈련) - 울산(취업처) - 경남(거주지, 취업처) ⇒ 온라인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광역 취업지원

◈ (**충청권**) 대전(거주지, 산단) - 세종(거주지) - 충남(산단) - 충북(거주지) ⇒ 행정접경 지역 산단 중심 취업알선, 교육훈련 지원